

1990년대 이후 일본의 대(對)중국 외교정책
변화 연구-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일본의
우경화를 중심으로-

신현석(Shin, Hyeon-suk)*
고희탁(Koh, Hee-tak)**
(E-mail : glocal@yonsei.ac.kr)

논문접수일 : 2011년 1월 1일
논문심사일 : 2011년 1월 27일
게재확정일 : 2011년 2월 8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취득대학 : 도쿄대학

현직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BK연구교수

1990년대 이후 일본의 대(對)중국 외교정책 변화연구: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일본의 우경화를 중심으로

<국문요약>

본 연구는 1990년 이후 일본 정부의 중국에 대한 외교정책 변화과정을 중국의 급속한 경제적 성장과 일본의 우경화를 독립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것이다.

1970년대 초 동아시아에서의 소련의 군사적 전개에 대항하기 위해 미·중·일 간의 전략적 제휴의 산물로서 '72년 체제'가 형성되었다. 이후 중일 관계는 경제적 상호의존을 심화시켜갔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 이후 1990년대에 이르러 일본의 대중국 정책은 요동치게 된다. 특히 고이즈미 정권기에 일본의 우경화 경향과 더불어 역사문제, 영토분쟁 등의 다양한 외교적 마찰이 표면화한 것은 그 전형적 사례였다. 그에 따라 '72년 체제' 또한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동아시아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중국의 급속한 경제적 부상과 일본 국내적인 차원에서의 우경화를 독립변수로 삼아 종속변수로서의 1990년대 이후의 일본의 대중국 외교정책의 변화과정을 각 정권별 외교적 이슈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특히 중일관계를 둘러싼 원심력과 구심력의 교차적 양상을 1990년대부터 현상화하기 시작한 '72년 체제'의 구조적 변동과 연관 지어 주목하였다.

[주제어] '72년 체제', 미·중·일 제휴전략, 일본의 우경화, 중국의 부상, '아시아 중심 외교'

I. 들어가며

전후 일본 외교정책의 기본노선은 이른바 ‘요시다 독트린’에 입각해왔다.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 의존하고 일본정부는 경제발전에 전념한다는 경제우선주의 정책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최희식 2008, 146-147). 그렇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 일본의 동아시아 외교정책에 일정한 변화를 초래한 국면이 전개되었다. 그것은 당시의 미·소 테탕트 분위기와는 달리 동아시아에 대한 소련의 군사적 전개가 현저해진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소련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한다(손기섭 2003, 120-121, 133). 중국정부 역시 동아시아에서의 소련의 군사적 전개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손열 2008, 120). 이처럼 상호접근이 절실했던 양국은 1972년 국교정상화 합의에 이르게 된다. 이로부터 이른바 ‘72년 체제’가 성립하게 되었다. ‘72년 체제’란 1972년 중국과 일본의 양국 정부가 국교정상화에 합의하여 작성한 ‘중일 공동성명’과 1978년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총리와 중국 부수상 덩샤오핑(鄧小平)의 주도 하에 체결된 ‘중일 평화우호조약’을 두 축으로 성립하여 미·중·일 외교안보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제휴로 발전한 중일 관계의 외교적 기본틀을 가리킨다. 1979년 미중 국교정상화는 이러한 미·중·일 간의 전략적 제휴의 연장선상에서 실현되었으며, 이 구도는 기본적으로 198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다(손기섭 2003, 108; 2004a, 95-96).

그러나 소련의 붕괴에 따라 탈(脫)냉전이 본격화한 1990년대에 이르면, 일본의 대중국 정책은 요동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2001년 등장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나 교과서 왜곡문제 등에 의해 중일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고이즈미 정권 이후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중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대중 외교전략

구상으로서 이른바 중일 간의 ‘전략적 호혜관계’를 제기하거나 2007년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가 적극적인 아시아 외교를 강조하고,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이룬 2009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아시아 중심 외교’를 제창하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염두에 두어 같이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중일관계를 둘러싼 원심력과 구심력의 교차적 양상은 탈냉전 이후의 외교적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닐까. 그 배경에는 한편으로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내 우경화 경향이라 할 만한 변화가 개재되어 있다(김태기 2006, 301-308; 손열 2008, 124-128). 특히 1996년 미일 안보 공동선언 이후의 미일동맹 강화와 평화헌법에 대한 개정논의는 그 상징적 사례이다. 이러한 측면은 특히 ‘72년 체제’의 기반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는 점과 관련해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특히 국교정상화 당시 중국정부가 양보했던 내용들이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 조건상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중국정부가 국교정상화 당시 일본에 양보했다고 볼 수 있는 두 가지 내용은 미일동맹의 용인과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권의 포기였다(손기섭 2005, 236). 그러나 1990년대 이후는 그 이전과 양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동아시아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중국의 급속한 경제적 부상과 일본 국내적인 차원에서의 우경화를 독립변수로 삼아 종속변수로서의 1990년대 이후의 일본의 대중국 외교정책의 변화과정을 각 정권별 외교적 이슈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특히 중일관계를 둘러싼 원심력과 구심력의 교차적 양상을 1990년대부터 현상화하기 시작한 ‘72년 체제’의 구조적 변동과 연관 지어 주목하고자 한다.

II. ‘72년 체제’와 1990년대 이후의 중일 관계

1. '72년 체제'의 성립과 미·중·일의 전략적 제휴

전후 일본 외교정책은 평화국가를 지향하고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경제우선 외교노선으로 대표되었다. 이는 미군정 하에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면서 구체화되었다. 일본국헌법 제 9조는 일본이 전쟁과 군대를 포기하도록 규정하였다. 평화국가노선을 주창한 요시다 총리는 외교적으로 미일 안보협조체제를 그 핵심으로 선택하였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남북한 관계를 포함하여 동아시아의 냉전이 고착화되고 나서 미중 접근으로 그 긴장관계가 완화될 때까지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외교적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아시아 국가들과의 역사적 관계를 제쳐두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초강대국 미국에의 추종노선, (2)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전제로 하면서도 특정 이슈나 특정 범위에서 제한적인 대미 자주외교를 추구하는 노선, (3) 소련과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과 거리를 두는 자주외교 노선 등의 세 가지 길이였다.

전후 이래 1970년대 초반까지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기시 노부스게(岸信介),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정권은 (1)을 추구하였으며,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 이시바시 탄잔(石橋湛山) 정권¹⁾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2)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3)을 주장했던 세력은 사회당과 공산당 등의 야당이었는데, 이들은 정치권력을 장악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 외교정책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렇기는 하지만 (2) 혹은 (3)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무역, 준(準)정부 간 무역을 추진하면서 특유한 대중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이 있었

1) 전후 일본의 정권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아시아주의'의 경향을 나타내며 자유주의 국제정치관에 입각해 아시아와 접촉하려 했던 것은 이시바시 탄잔(石橋湛山) 정권(1956년 12월~1957년 2월)이었다(모리 카즈코 2006, 30-33).

기에 1972년 중일 정상화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모리 카즈코 2006, 32-33). 이러한 과정을 거쳐 중일관계는 다나카(田中) 정권기의 1972년에 국교 정상화를 통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다. 바로 ‘72년 체제’의 시발점인 것이다. 1972년 9월 29일 북경에서 발표된 중일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은 종전의 중화민국(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의 배경에는 1970년대부터 소련의 동아시아에 대한 적극적 군사적 진출이 일본 국민들에게 자국의 안보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는 측면이 크다. 이와 동시에 일본이 보유한 자위대 군사력으로 소련의 군사적 진출에 대처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소련의 대외 팽창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절실히 요구하게 되었다.²⁾ 중국정부도 중소분쟁의 영향으로 소련과의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왔으며, 더욱이 소련이 적극적인 팽창주의적 입장에서 인도와 베트남 등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중국의 남부지역에 대한 포위를 더욱 강화해나가자 그에 대한 우려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무엇보다 중국정부를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로 유인한 결정적 동기는 미중 관계 및 중소관계의 교차점에서 소련이라는 잠재 적국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모리 카즈코 2006, 111).

물론 ‘72년 체제’의 성립은 단순히 안보적 측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1972년의 ‘중일 공동성명’은 저우언라이(周恩來)수상의 직접 지도에 의해 실현된 것이었다. 그러나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은 저우언라이 수상이 발안한 것이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그것을 완성시킨 이는 덩샤오핑이었다. 이처럼 ‘72년 체제’의 구축은 2단계의 과

2) 중국은 국제정치 측면에서 접근을 하며 일본의 배상문제, 미일안보조약 등을 거론하지 않는 등 일본에 일정 부분 양보를 하였다. 반면에 일본은 국내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미중 관계정상화는 당시 다나카 수상의 집권 공약이었으며 이와 함께 중일 간 경제교류의 확대를 원하는 재계의 움직임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손열 2008, 120).

정을 거치는 것이었다. 국교 정상화 이후 평화우호조약의 조기 체결을 희망한 중국정부는 1974년부터 일본 측에 교섭개시를 요청하여, 1978년 8월의 조인에 이르기까지 4년 정도의 교섭이 진행되었다. 특히 비준교환이 있는 후, 덩샤오핑은 미일 안보조약과 자위대에 대한 이해를 표시함으로써 중일 관계가 새로운 전환기에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³⁾ 이를 계기로 실무협정을 거쳐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새로운 중일 관계가 맺어졌는데, 그것은 대일 전쟁배상권의 포기에 따른 중일 간 경제협력의 본격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본정부에 의한 대중 엔 차관협력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손기섭 2005, 240).

이렇게 성립된 중일 관계에서의 '72년 체제'는 1970년대 성립기, 1980년대의 발전기, 1990년대의 조정기라는 3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우선 성립기의 중일 관계에서는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와 확대가 눈에 두드러졌다. 1980년대에 중국과 일본 간의 활발한 민간 경제협력과 정상외교는 이를 더욱 견고히 하였다. 더욱이 미중 관계의 변화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중일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중일 국교정상화는 당시 미중 관계의 개선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손기섭 2005, 240). 이러한 구조적인 동아시아의 정치동학은 1978년도에 중일 간의 평화우호조약과 1979년 미중 국교정상

3) 1974년 1월과 1975년 1월 각각 예비교섭이 있었으나, 패권조항(霸權條項)이 문제가 되어 난항을 거듭하다가 교착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이미 중일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바라지 않으며, 패권을 확립하려는 다른 어떤 나라 또는 집단에 의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라는 견해에는 일치하였으나, 그 후 중국 정부가 반(反)패권조항에 소련의 이름을 넣어 소련 비판을 명문화하자는 요청을 해옴으로써 난항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이 조항은 특정 지역과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어떤 국가의 패권 시도도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되어 1978년 10월 23일 비준·승인되었다. 또한 이 평화우호조약은 "체결국의 제3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어 일본의 전방위외교(全方位外交)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했다(두산백과사전 두피디아 2011).

화로 그 기본 틀이 완성되었다. 그 결과가 1980년 초중반 일본의 나카소네 내각과 미국의 레이건 정부, 중국의 후야오방 정권에 의한 미·중·일 3국의 긴밀한 협력과 국가이익의 공유로 나타났다(손기섭 2004a, 109-111). 그러나 동아시아에서의 확고한 미·중·일 전략적 제휴는 결국 소련을 자극하게 되었다. 미·중·일 접근에 대한 반응으로 소련은 베트남과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그런 상황에서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하자, 이번에는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였다. 그 연장선상에서 중국정부는 1979년 미국과 국교를 공식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중소 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소련에 통보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미·중·일의 전략적 제휴와의 대립을 한층 더 선명히 하게 된 원인이기도 하였다(손기섭 2004a, 105).

2. 1990년대 미일동맹의 강화

그런데 소련의 붕괴와 탈냉전의 흐름은 1990년대 이후 미일동맹에 미묘한 변동을 초래하였다. 그것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특징을 보인다. 첫째, 소련의 붕괴와 함께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미일 관계, 중일 관계, 미중 관계의 삼각관계의 틀이 유동적으로 변화하였다. 냉전은 전후 미일관계를 형성하는 근간이 되었으나, 냉전의 종식으로 인해 미일 관계는 그 존재이유를 다르게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중일 관계의 틀에서 본다면, 1980년대 중일 관계의 마찰은 크지 않았지만,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양국 간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가중되었다. 더욱이 중국의 핵실험과 군비증강, 대만과의 관계 악화 등은 1980년대까지 이어진 미·중·일 전략적 제휴의 폭을 좁히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일 동맹관계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의존하는 관계를 벗어나 대등한 전략적 파트너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미일동맹의 성격변화에 따라 일본정부는 적극적이고 자주적

인 외교정책을 추진하며 국제적 역할 증대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손기섭 2007, 230-232).

둘째, 일본의 새로운 안보전략을 통해 1996년 이후 미일동맹은 재강화되는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1980년대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는 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토대로 자주정책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나카소네 총리의 주장이 1990년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자민당 간사장의 ‘보통국가론’으로 이어지면서, 이 흐름은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가와 헌법개정, 안전보장체제의 협력의 틀로 구체화되었다. 특히 1991년 걸프전에서 130억 달러를 지출하고도 동맹국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인정을 받지 못한 일본정부는 그간의 외교노선의 문제를 인정하면서 일본의 국제적 역할 증대와 외교적 공헌강화라는 외교노선으로 변경하기 시작하였다(나카소네 야스히로 2001; 소에야 요시히데 2006). 그렇기는 하지만, 그 노선의 전제로서 미일동맹의 재강화가 드리워져 있다는 점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1996년 미국의 클린턴 정부와 하시모토 내각은 견고한 동맹관계로서 나아가기 위해 ‘미일 안전보장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그리고 1997년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⁴⁾, 1999년 주변사태법의 제정 등으로 동맹정책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종전의 미일 안보조약의 성격도 미국의 일본 방위의무, 경제협력에서 더 나아가, 군사적인 면도 포괄하는 지역안보 동맹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1999년 클린턴 정부에서 미일동맹을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초석’으로 정의한 것은 그 상징적 사례이다. 그것은 냉전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미일동맹을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분쟁방지를 위한 협력의 틀로 정의한 것이었다(손기섭 2007, 234).

셋째, 2001년 이후 미국의 국방정책이 반테러정책과 이라크 전쟁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미국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4) ‘신방위협력 지침’은 ‘평시’, ‘직접 무력공격의 경우’, 일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주변사태’등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한다.

대응하면서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안보정책을 발전시켜 나아갔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정부는 일본을 비롯한 우방 국가들에게 반테러정책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일련의 법적 제도화를 통해 국내법을 정비하고 미일동맹의 강화를 도모했으며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시도하였다.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협력’을 약속하였고, 이와 함께 자위대법 개정, 일본 본토의 유사시를 상정하는 유사법제, 테러대책특별조치법 등을 제정하였다. 2004년 12월에 발표된 방위계획대강⁵⁾ 제2차 개정에서는 일본은 미일동맹을 강화하고자 하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⁶⁾

3.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일본의 외교정책 변화

과거 소련과의 협력과 대립을 통하여 동아시아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해왔던 중국정부는 1990년대 이후 들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과 일본의 세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보이기 시작한다. 그 배경에는 탈냉전 이후 새로운 국제정치질서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

-
- 5) 방위계획대강은 일본의 중장기 안전보장 및 방위력의 기본방침과 그에 입각한 자위대의 부대 규모, 전차·전투기·잠수함 등 장비 규모를 정한 문서다. 냉전이 한창이던 1976년 최초로 만들어졌고 1995년에 1차 개정이 이뤄졌다. 2차 개정이 이뤄진 2004년 당시 “향후 5년마다 개정한다”고 했으나 2009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숙고가 필요하다”며 발표를 1년 미루게 되었다(중앙일보 2010. 12. 18).
- 6) 방위계획대강 제2차 개정에서는 일본은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세 가지 중요한 안전보장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국제적 안전보장, 실효적 안전보장, 통합적 안전보장 및 국제적 안전보장이 그것이다. 실효적 안전보장은 육상, 해상, 항공으로 구성된 일본 자위대가 보다 실효적이고 기능적으로 재편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이고, 통합적 안전보장이란 국제사회, 주일미군 및 자위대가 보다 유기적 통합적으로 행동할 것임을 말한 것이다. 국제적 안전보장은 동아시아 이외 지역에서도 국제평화와 일본안전에 중요하다면 일본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중앙일보 2010. 12. 18; 손기섭 2007, 235).

는 성격이 될 것이며 그것은 동아시아에서 결국 중국을 압박하는 형태로 구축될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더욱이 중국은 1996년부터 강화된 미일 간의 안보체제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까지는 영토 분쟁, 국제적 무역경쟁,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 등 중일 간의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중국정부는 일본과 지역 내에서의 주도권 다툼이 격렬해 진다면 중국이 경제발전을 하는데 결코 유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중국은 1978년부터 시작된 개혁개방정책 이후 고도성장을 거듭해왔다. 지난 20여 년간 연평균 9% 이상의 실질 GDP 성장을 보이면서 세계 2위권의 경제세력으로 성장하였다.⁷⁾ 동아시아에 있어서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세력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사실 그간의 중국정부의 대일정책은 일본과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었고, 일본정부의 대중정책 또한 그에 대응하는 전략에 치중해왔다. 전후 1972년부터 정상화된 중일 관계는 중일 정치경제의 상호의존, 대중원조의 복수년도 총액결정으로 보완 및 발전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급속한 경제적 발전과 군사비 증대 등으로 인해 중일 관계의 '특수성'은 많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등장한 '중국 위협론'⁸⁾이 1990년대 전반부터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이 지역 강대국으로 등장한 이후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동아시아의 핵심 이슈가 되었다. 냉전 이후 세력균형이 약화되며 불안정해진

7) 2011년 1월 현재 중국은 경제순위(GDP 기준)는 세계 2위이며, 아시아에서 1위이다(중앙일보 2011. 2. 12).

8) '중국 위협론'은 1992년 먼로(Rosi H. Munro)가 '이코노미스트'에 기고한 논문인 'Awakening dragon; the real danger in Asia is from China'에서부터 시작되었다(Avery Goldstein 2005; David M. Lampton, 2007; Denny Roy 1996; David Shambaugh 1999/2000).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미국과 일본의 동맹을 강화시켰지만, 일본의 우경화 및 무상원조 동결에 대한 중국의 비판, 그리고 영토분쟁 등으로 인해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어졌다. 또한 1996년 이후 급속도로 진전된 미일 안보협력관계의 전환은 센카쿠 열도 문제, 대만 이슈 등과 함께 중일 관계를 긴장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중국은 미일동맹이 일본을 군사대국으로 발전시키고 미일동맹이 아태지역에 있어서 미국의 군사적 전개를 지원하는 발판이며 일본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시켜 주는 수단이라는 점을 우려하였다.

다른 한편, 그 사이 일본은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이후 ODA(공적개발원조) 외교를 통해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지속하였다. 1979년부터 지속된 엔 차관 공여가 그것이다(손기섭 2004b).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2005년까지 일본 정부는 대중 엔 차관을 3조 엔을 넘는 규모로 지원하였으며, 중국이 받은 해외차관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42%로 압도적이었다. 일본이 제공한 중국에의 ODA는 중국의 인프라 시설 구축, 외자유치, 경제발전 가속화 등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ODA를 통해 일본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며 일본의 외교적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과의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급속한 경제적 발전은 '중국 위협론'과 함께 일본 국내의 우려와 경계심을 강하게 촉발시켰다.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가 가져다주는 정치적 결과가 역으로 일본 국내의 거부적 반응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중국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대외무역의 증가와 무역수지 흑자에 따른 중국의 성장은 일본의 ODA가 갖는 상징성과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점차 약화시켰다. 그리고 중국은 정책전환을 통해 1994년 처음 개최된 ARF(Asian Regional Forum)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으며 동남아시아에 대한 FTA에 대한 적극적인 체결도 제안하고 있다. 중국이 이렇게 적극적 정책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지역 내 미국에 대한 견제와 동아시아에서 경제·안보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일 간의 외교적 경쟁은 1990년대 이후 중일 관계의 변화양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

라 할 수 있는 것이다.

Ⅲ. 고이즈미 내각기: 갈등과 대립의 연속

고이즈미 내각기 일본의 동아시아 외교에서 눈에 띄는 것은 중일 관계의 갈등과 대립이었다. 1998년 11월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의 일본 공식방문에서 ‘중일 공동선언’을 채택하며 중일 우호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노력을 하였지만, 양국이 역사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장쩌민 국가주석은 일본 방문 내내 역사 문제를 계속 거론하였고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대만문제에 있어서도 불분명한 태도를 보였다.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방문을 통해 중일 협력 파트너십 선언을 끌어내면서도, 의견 차이로 인해 1990년대 이후 소원해진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에는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치적으로 협력과 반목을 계속하는 중일관계의 구조적 모순은 1970년대 이후의 전략적 제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묘한 균형 속의 중일 관계가 2001년 고이즈미 총리의 취임 이후 계속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와 맞물리면서 양국의 갈등은 깊어만 갔다.

한편, 일본 국내 정치적으로는 ‘55년 체제’가 종결되고 비(非)자민 연립정권의 등장과 1994년 중의원 선거제도를 소선거구 비례대표병립제로 전환한 이후, 2003년에 이르러 뚜렷한 변화의 특징을 보이게 된다. 특히 평화헌법 개헌, 미일동맹 강화, 안보리 상임위 지향외교 등의 새로운 정책노선을 지향하는 자민-민주 중심의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손기섭 2004a, 239). 이처럼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정치와 외교는 국내문제와 연결되면서 중일관계는 ‘특수한’ 관계에서 벗어나 긴장 속의 갈등을 거듭하게 된다. 그리고 복합적인 갈등의 확대는 이제 중일 관계가 과거의 ‘72년 체제’의 안정된 제도적

들 안에 머물기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여기서는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시작된 중일관계의 악화가 엔 차관협력 중단과 해양자원조사 마찰,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갈등 등 복합적인 요소를 다루고자한다.

1.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역사 교과서 문제

일본 나카소네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공식참배 이래 야기된 중일간의 정치적 마찰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신사참배로 다시 쟁점화되었다. 2002년 4월 21일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신사 참배는 지난 1985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이후 16년만의 일이라는 점에서 그의 참배는 중국의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반일 시위가 격화되는 원인이 되었다. 고이즈미 총리는 매년 한 번씩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함으로써 중일 관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최대의 외교적 쟁점으로 야스쿠니 문제를 부각시켰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과 한국의 반대입장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신의 국내적 정권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내셔널리즘을 자극하려는 측면이 있을지 모른다. 실제로 일본 여론을 보면, 그에 대한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⁹⁾(김성철 2009, 145) 고이즈미 총리는 2004년 3월 15일에도 ‘일중 관계는 양호하며 앞으로도 야스쿠니를 참배하고 싶다’며 그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손기섭 2005, 249).

또한 역사 교과서 문제와 역사 인식의 차이가 일본 국내정치에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는 이미 1960년대부터 역사 교과서의 편향 문제가 제기되면서 일본 내에서는

9) 2002년 10월 APEC 회의 중 중일정상회담에서 장쩌민 주석은 고이즈미 총리에게 야스쿠니 참배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으나, 고이즈미 총리는 참배하지 않겠다고 언급하지 않는다. 그 후 고이즈미 총리는 2003년 1월 다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였다.

물론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는 중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우호협력이나 평화공존에 하나의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더불어 대중 엔 차관 중단,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갈등¹⁰⁾, 해양자원조사 마찰 등의 다양한 쟁점이 한꺼번에 중일 관계에 표출되면서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 4월 상하이,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도시 전역에서 일어난 격렬한 반일시위는 중국과 일본의 예상을 뛰어 넘는 결과를 초래했다.¹¹⁾ 중국 정부는 후진타오 국가주석 및 리자오싱 외상이 직접 나서서 공개적으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중지를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반일시위로 입은 피해보상과 사과를 요구하고, 2008년도를 시한으로 대중 엔 차관 협력의 중단을 통보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손기섭 2005, 250).

2. 센카쿠열도 영유권 및 동중국해를 둘러싼 갈등

중일 간의 영토 및 자원문제는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와 천연가

-
- 10) 일본 정부는 2005년도 유엔 안보리 확대 개혁안을 제출함으로써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고자 의도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미국이 대폭적인 유엔 상임위 개혁에 소극적이었고, 중국과 한국 등 동아시아 주요 각국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대표성을 강조했지만, 가장 중요한 중국과 한국과의 교감이 없었고, 그러한 인식의 격차를 좁히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손기섭 2007, 241).
- 11) 2005년 4월의 주말에 벌어졌던 반일시위는 예상 외로 강경했다. 첫째는 군중적인 반일운동이 되어 버렸다는 점에서다. 둘째는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중국 국민들이 ‘일본 상품 불매’라는 80년 전의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는 것, 셋째는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라는 역사문제와는 관계없는 새로운 문제를 등장시켰다는 것이다(모리 카즈코 2006, 198; 손기섭 2005, 250-251).

스자원 발굴 문제이다. 조어도는 원래 중국에서는 조어대군도라 불리며 일본은 尖閣列島(Senkaku Retto)라 부르고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Senkaku Islands'로 호칭하고 있다. 그리고 조어도는 타이완 지룽(基隆) 시로부터 1백 86km 떨어져 있고 중국 대륙 저장 성 윈저우(溫州) 시로부터는 3백 56km 떨어져 있으며, 일본 오키나와 섬으로부터는 4백 17km 떨어져 있는 섬이다. 총 면적이 6.3km²에 불과한 무인도이다(시사저널 2010. 11. 03). 중국정부는 청일전쟁의 패배로 일본에 이 섬들을 강제로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100여 년 전 이미 조어도가 무인도임을 확인한 후 1889년 메이지정부가 센카쿠 열도를 1895년 1월 14일 오키나와 현 이시가키 시에 정식으로 편입한 엄연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르면 조어도가 일본이 반환하게 된 대만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일본 영토라는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국정부는 조어도가 역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대만의 부속도서인 만큼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본의 대만 반환과 함께 자동적으로 중국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시사저널 2010. 11. 03).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이 체결된 이후 잠복해 있던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가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와 함께 양국 간의 중요한 외교적 이슈가 된 것이다. 특히 조어도는 비록 작은 섬에 불과하지만 그 군사적 가치와 함께 엄청난 매장량을 가진 동중국해의 해저자원개발의 전초기지가 된다는 점에서 양국이 양보하기 어려운 전략적 존재이다.

게다가 동아시아 해상 교통로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전략 요충지라는 측면도 양국의 첨예한 대립을 완화시키기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중국해 해양자원조사 문제 또한 영유권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 2005년에는 주로 중국정부의 동중국해 12) 주변해역

12) 동중국해는 '대립의 바다'라고 할 만큼 중국과 일본은 물론 필리핀, 대만 등과도 해양자원 개발과 영토문제, 안보문제 등으로 갈등과 대립이 상존하는 해역이다.

의 천연가스 해양자원 조사를 두고 양국의 신경전이 전개되었다.

이처럼 고이즈미 내각기는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 등으로 중일 관계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고 그와 동시에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도 외교적 쟁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양국 간 외교적 위기가 고조된 시기였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양측의 전면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은 편은 아니다. 여전히 일본과 중국이 역내 안정 및 양국의 경제협력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미국 또한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분쟁 당사국들에게 평화적 해결과 자유항해의 보장이라는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Shambaugh 2004).

3. 중일관계에 있어서 안보적 현안과 대만문제

1990년대 들어 일본은 이전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군사·안보정책을 모색해왔다. 이는 중일 관계에 있어서 각각의 ‘중국 위협론’과 ‘일본 신(新)군국주의론’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일본은 UN평화유지활동 협력방안을 통과시키고 ‘캄보디아 국제평화 협력업무 실시 계획안’을 공식 채택함으로써 전후 최초로 자위대의 해외파견에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1996년 미일 ‘안전보장 공동선언’과 1997년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본격적인 해외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 더욱이 고이즈미 내각기였던 2004년 12월에 발표된 ‘방위계획대강 제2차 개정’ 및 2005년도 방위백서를 통해 중국의 경제적 급성장이 일본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기한 데에서도 잘 알 수 있다(손기섭 2005, 246-247).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일본이 단순히 막대한 규모의 경제력을 가지는데 만족하지 않고 동북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길 원한다는 점에 있다.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일본이 현상유지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희망하는 바가 실현되려면 무엇보다 일본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지역 환경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그 만큼 중국과 일본의 정치적 마찰의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갈등의 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연계된 일본의 대(對) 중국 안보위협이나 주권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양보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Avery Goldstein 2005, 7).

중국은 이전부터 평화공존 5원칙¹³⁾에 의거하여 중국은 평화국가이며 타국에 대한 무력사용은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중국의 전략문화와 군사력 사용유형을 살펴보면 중국은 역사적으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안보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며 또한 실제 많은 사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조선일보 2010. 10. 14).

특히 중국은 대만문제에 대해 일본이 개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만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문제이기도 한 만큼 그 비중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2004년 중국정부는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면 비평화적 수단을 써서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반국가분열법을 제정했다. 이에 반해 미국의 국내법인 대만관계법은 대만문제에 대한 무력사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김성철 2009, 160).

또한 일본과 한국은 정치적으로는 대만과 거리를 두고 있으나, 민간차원에서의 교류 및 무역 등 경제적 관계는 여전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정부는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으로 유사시 대만해협에의 미국과 일본의 개입 여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으며, 중국은 대만이 미국 주도의 동북아시아 지역 TMD(Theater Missile Defense)구상에 포함되는 것을 중국에 대한 주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여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동아일보 2001. 07. 18). 이처럼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13) 주권과 영토보전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호혜평등, 평화공존 등을 말한다.

연제라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중일 관계의 중요변수 중 하나인 것이다.

IV. 고이즈미 정권 이후의 중일 관계

1. 아베 정권의 ‘가치 외교’

고이즈미 총리는 총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로 자민당 총재의 임기가 끝나는 2006년 9월에 내각총리를 사임하였다. 그 다음으로 총리에 취임한 아베 신조 총리는 ‘전후 레짐으로부터 탈피’와 ‘할 말 하는 외교’를 내걸었다. 하지만 연금 문제, 자민당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문제, 각료들의 실언문제 등은 아베 정권의 신뢰 및 권위를 급격히 저하시켰으며, 그에 따라 건강악화의 이유로 2007년 9월 26일 아베 총리는 사임하였다.

아베 정권은 보수적 정책 추진과 경직된 국정운영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에 실패한 듯이 보인다. 하지만 외교적으로는 전임 내각인 고이즈미 총리의 동아시아 외교의 실패를 만회하면서 글로벌 차원까지 확대된 미일동맹의 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를 추구하였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서 실질적 자제의사를 나타내었고, 중국정부도 고이즈미 정권기의 위기 재현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드러내었다. 이와 같은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아베 총리는 2006년 미국 방문에 앞서 중국과 한국을 방문하여 관계정상화를 시도하였고, 이에 대한 중국 원자바오의 일본 방문과 중일 간의 ‘전략적 호혜관계’ 선언으로 이어졌다(김성철 2009, 150).

그와 동시에 2006년 11월 아소 타로(麻生太郎) 외상이 ‘자유와 번영의 호(弧)’¹⁴⁾라는 신 전략선언을 통해 경제대국으로서의 21세기의

14) ‘자유와 번영의 호’는 일본에서부터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발칸에서 발트해에 이르는 거대한 반달 모양의 지역을 말하며, 이 지역에서 일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였다. 미일동맹의 강화와 중국, 한국,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의 토대 위에서 ‘가치의 외교’에 기본 바탕을 두고 유라시아 대륙의 외주에 위치한 국가들과의 ‘자유와 번영의 호’ 연대 구축을 도모하였다. 아베 정권의 외교는 아시아외교에서 고립을 자초했던 고이즈미 정권의 문제를 인식하여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동시에 인도 및 호주 등과의 전략적 연대를 쌓아가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

2. 후쿠다 정권의 공명(共鳴)외교: ‘아시아 속으로’

아베 정권 이후 출범한 후쿠다 야스오 정권의 기본적 외교정책은 미일동맹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기본으로 하고 적극적인 아시아외교의 추진, 6자 회담 등을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이는 동아시아 외교에 있어서 고이즈미 정권기보다 더 온건하고 평화로운 다자적인 틀에서 역내 안정을 추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연현식 2008, 341-343).

후쿠다 정권기의 ‘공명(共鳴)외교’는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의 실패와 그에 따른 중간선거의 패배로 인해 종전의 외교적 방침을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과 맞물리는 것이었다. 특히 친(親)중적 색채가 강한 후쿠다 내각이 들어서면서 중일관계는 새로운 관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일 관계는 2007년 아베 총리와 원자바오 총리가 약속한 ‘호혜적 관계’의 틀을 유지·확대하는 선에서 점진적 관계개선이 예상되었다(연현식 2008, 342). 후쿠다 총리는 2008년 5월 아시아 외교를 표방하며 ‘신(新)후쿠다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일본의 외교노선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ASEAN의 통합발전을 지원한다. (2)미일동맹을 강화한다. (3)평화협력국가로서 책임을 다한다. (4)청소년 교류에 따라 아시아의 미래를 지원하는 지적이고 세계적인

본이 아시아 국가에서 모범을 보이고 외연을 확대하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태동, 그리고 의식적으로 국가들의 민주화와 번영의 길로 일본이 협조자가 되자는 것이다.

인프라를 만든다. (5)경제성장과 환경보호, 기후변동 대책의 양립이라는 문제에 대응한다(김성철 2009, 160). 이러한 후쿠다 총리의 동아시아 외교방침은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에게 이익의 공유와 통합을 위한 노력으로 해석되었다.

후쿠다 내각의 대중 외교의 기본 인식은 어떻게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여러 측면에서 아시아와 안정과 성장에 공헌하도록 건설적으로 이끌어 내는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었다. 물론 거기에는 중국정부의 상황인식도 작용하고 있었다. 중국정부는 고도경제성장을 통한 자신감과 함께 아시아의 선두주자인 일본을 경쟁자로 인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기술과 자금력을 인정하고 있었다. 일본 또한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상호의존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진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호 인식 아래 양국 지도자 간의 잦은 접촉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2008년 5월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는 10년 만에 일본을 방문하여 '전략적 호혜관계의 확대'에 합의하였고,¹⁵⁾ 또한 7월에는 일본정부의 초청으로 홋카이도(北海道)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에도 참석하였다. 그리고 2008년 8월에 열린 북경올림픽에도 양국의 정치·경제계 인사들의 대규모 교류가 이루어졌다. 마침 2008년은 중국과 일본이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였다는 측면도 작용하여 양국 정부는 상호의존적 발전과 신뢰 구축을 위해 상호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다(연현식 2008, 346).

더욱이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중일 간의 경제관계는 크게 확대되었다. 홍콩을 제외한 2007년 중일 간의 무역총액은 27조 8,676

15) 중일간의 전략적 호혜관계는 당초 2006년 10월 중국을 방문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가 중국 측에 제안하고 2007년 4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면서 논의되었다. 후진타오 주석의 방일을 통해 중국과 일본은 전략적 호혜관계를 확대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적용해 나간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아시아경제 2008. 05. 12).

역 엔으로 처음으로 미일 무역총액을 웃돌았다. 중국 측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일본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36억 달러로 제2위의 규모였다.¹⁶⁾ 이러한 경제 분야에서의 전략적 우호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2007년 4월 원자바오 총리의 일본 방문 시 중일 경제관계 및 국제경제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중일 간의 하이레벨 경제관계자 대화가 개최되었다(김성철 2009, 157).

그 해 12월 경제 각료 제1차 대화가 행해졌는데, 거기서 (1)양국의 거시경제정책, (2)기후변동을 포함한 환경·에너지 절약, (3)무역투자, (4)지역 및 국제 경제문제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물론 이러한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의 확대에는 다자외교를 통한 역내 불안정성의 해소와 안정의 추구라는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동아시아 정상회담(EAS), ASEAN+3, 한·중·일 협력이라는 여러 범주 안에서 아시아 지역 협력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APEC), ASEAN 지역포럼(ARF) 등의 지역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바가 그것이다(김성철 2009, 154).

이러한 경제협력의 밑바탕에는 중국에 대한 우호적 입장이 일본 조야 각계의 공동인식이 존재한다. 과거 고이즈미 내각의 대중국 정책이 중일 정치관계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한 이래 일본의 우익 강경 정책에 대한 견제 인식이 일본 조야 각계에서 이전보다 더욱 뚜렷해졌다. 일본은 최근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경제 정체기에 처해 있었지만 중국과의 무역관계는 오히려 매년 10%의 성장세를 보여 왔다. 이는 중일 양국 경제가 강력한 상호 보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

16) 일본기업의 對중국 직접투자는 80년대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나 90년대 초반 이후, 특히 1992년 이후 중국의 개혁가속과 중국 경제의 호황에 편승하여 對중국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와 투자환경 미비가 중국투자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어져 對중국 직접투자가 감소하였다. 2000년 이후 중국의 투자환경 개선과 WTO 가입을 계기로 재차 급증하기 시작하였다(삼성경제연구소 2006).

를 들어 일본은 원자력 기술과 재생에너지 등 분야 등에서 세계적인 선진기술을 갖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게도 중요한 학습 의미가 있다. 또 중국 시장의 거대한 잠재력은 양국 간에 거대한 협력 공간을 제 공해주고 있다.¹⁷⁾

V. 맺으며

2009년 9월 16일 정권 교체를 통해 민주당 출신의 하토야마 유키 오(鳩山由紀夫) 총리가 취임하였다. 특히 그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적 접근과 함께 중일 관계에 대해 신중하고 성의 있는 태도를 강조하면서, 먼저 과거사에 대한 호소카와(細川)의 대주변국 외교노 선과 무라야마(村山) 담화 계승을 공식화하며 아시아 외교를 본격적 으로 추진하였다(한겨레신문 2009. 9. 6). 물론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거부한 것은 그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와 함께 중국을 견제하거 나 배제할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중국의 부상을 현실적으로 인정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에 대한 균형자 역할을 시도하였다. 그 상징인 ‘우 애(友愛)와 상생(相生)’이라는 미래의 담론을 통해 미국 주도의 세계 화에 내포된 한계를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공동체적 관계의 형 성을 역설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호혜와 협력의 공동체를 제안하 였다. 이는 중국의 부상과 함께 일본의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가 종 전의 일본정부가 오랫동안 중시했던 미일 관계와 중일 관계의 틀에 대한 새로운 구조적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을 지 모른다.

동아시아는 21세기에 들어서 경제협력과 문화교류를 통해 각국의

17) 일본 기업들의 중국 투자는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2008년 9월까지 일본 의 대중국 투자누계 항목은 4만 건이 넘었으며 실제 투입 금액은 646억 달러에 달해 이는 중국에 대한 해외투자 국가 가운데 두 번째이다(프레 시안 2009. 01. 30).

관계가 한층 더 가까워졌다. 동아시아 각국의 상호의존과 관계 강화에 따라 역내 거버넌스(governance)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72년 체제’라는 틀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을지 모른다. 1972년 합의를 충분히 고려한 뒤, 새로운 단계의 중일 관계를 규율하는 원칙, 아시아에서의 양자의 역할과 협력에 대한 합의를 형성하고, 그를 위한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이 요구되고 있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역내 거버넌스를 위한 다양한 채널의 필요성 또한 한층 더 증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10년 9월에 촉발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인 만큼 이와 같은 이슈들을 정부와 민간 차원까지 포함하여 사안별로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모리 카즈코 2006, 220). 혹은 동중국해의 가스전 개발문제를 둘러싼 구체적 실행을 위한 협의와 공동개발에 따라 얻어지는 쌍방의 이익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¹⁸⁾

동아시아 지역 강국인 양국 관계의 협력의 강화는 양국뿐만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안정과 번영의 시금석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 번영의 기초는 사실 지역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현명한 갈등관리에서 비롯된다.¹⁹⁾ 여기에 미국까지 그러한 우호적인 분위기에 동참한다면 다양한 지역현안의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²⁰⁾

18)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중국의 신사주간지 료오왕둥광저우칸(瞭望東方週刊)은 2010년 10월 중국과 일본 국민 2085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 조사에서 일본인 중 87%와 중국인 79%가 상대국을 ‘믿을 수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최근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앞으로도 중일 관계의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동아일보 2010. 11. 07).

19) 중국 인민대 스인홍(時殷弘) 교수는 중일 정치관계는 복잡하지만 ‘내재적인 평형의 관계’로 조정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국익을 놓고 경쟁하더라도 긴장과 위기를 통제하고 의심을 줄이며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동아일보 2004. 9. 1).

20)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지역 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

< 참고문헌 >

- 구본관, 2006, “일본기업의 해외투자 전략변화: ‘차이나+1’을 모색하는 일본기업”, 『SERI 경제포커스』 제94호.
- 국제통화기금(IMF), 2011, <http://www.imf.org/external/external/data.htm#data>, 2011/02/01.
- 김성철, 2009, “고이즈미 이후 일본의 동아시아 외교”, 『세종정책연구』, 제5권 1호.
- 김현기, 2010, “일본 방위력 핵심, 지상군에서 해·공군으로 이동”, 『중앙일보』 (12월 18일).
- 김태기, 2006, “쟁점논단: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한국”, 『한일민족문제연구』 제11호.
- 나카소네 야스히로 저, 박철희 옮김, 2001, 『21세기 일본의 국가전략 (二十一世紀日本の國家戰略)』, 서울: 시공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아베 총리 방중 이후 중-일 경제관계의 변화”, 『한중경제포럼』, 제07-01호.
- 두산백과사전, 두피디아, 2011,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AS_IDX=101013000727898, 2011/02/03.
- 모리 카즈코 저, 조진구 옮김, 2006, 『중일관계: 전후에서 신시대로』, 서울: 리북.
- 문정인, 2009, “[문정인칼럼] 일본 민주당 외교구상, 왜 희망적인가”, 『한겨레』 (9월 6일).
- 박세일, 2010, “[박세일 칼럼] 중국이여, 王道로 가라”, 『조선일보』 (10월 14일).
- 소에야 요시히데 저, 박철희 옮김, 2006, 『일본의 미들 파워 외교 전후(戰後) 일본의 선택과 구상』, 서울: 오름.

중, 북핵 관리를 포함한 안정적인 안보 네트워크의 구축, 중국의 부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말할 수 있다(William Tow 2007, 281-282).

- 소준섭, 2010, “가라앉지 않는 중·일 조어도 분쟁”, 『시사저널』 (11월 3일).
- 손기섭, 2005, “고이즈미 내각기의 중일 ‘72년 체제’의 갈등과 전환”, 『국제정치논총』, 제45집 4호.
- _____, 2003,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일중 국교정상화의 정치과정”, 『일본연구논총』, 제17호.
- _____, 2007, “일본의 동아시아외교: 미일동맹과 중일관계의 상관성”,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5권 3호.
- _____, 2004a, “일중 정치경제관계에서의 ‘72년 체제’의 발전과 전환”, 『일본연구논총』, 제19호.
- _____, 2004b, “일본의 대중 정부간 경제협력의 정책결정”,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3호.
- 손열, 2008, “‘중국의 강대국화’와 일본의 대응 - 관여, 결속, 위협 분산-”, 『일본연구논총』, 제28호.
- 송화정, 2008, “‘실용외교’ 돋보인 후진타오 방일”, 『아시아경제』 (5월 12일).
- 스인홍, 2004, “[세계의 눈]스인홍/중일 ‘평형의 관계’ 지향해야”, 『동아일보』 (9월 1일).
- 연현식, 2008, “후쿠다 야스오의 공명(共鳴)외교와 동북아”, 『일본학보』, 76호.
- 이원덕, 1996,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일본의 전후처리외교와 한일회담』, 서울: 서울대학교.
- 이종환, 2007, “대만 TMD 참여 검토 “中 미사일 견제 위해 필요””, 『동아일보』 (7월 18일).
- 인터넷 뉴스팀, 2010, “日 87% “中 못 믿어” 中 79% “日 못 믿어”... 양국관계 악화”, 『동아일보』 (11월 7일).
- 장리리, 2009, “아소 내각 출범 이후의 중일 관계”, 『프레시안』 (1월 30일)

- 장세정, 2011, “중국 지난해 GDP, 일본 제쳤다”, 『중앙일보』 (1월 21일).
- Gilpin, Robert, 1981,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ldstein, Avery, 2005, *Rising to the Challeng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Lampton, M, David, 2007, “The Faces of Chinese Power,” *Foreign Affairs*, Vol. 86, No. 1.
- Nye, Joseph., 2002, *The Paradox of American Power: Why the World's Only Superpower Can't Go It Alon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oy, Denny 1996, “The ‘China threat’ Issue Major Argument,” *Asian Survey*, Vol. 3, No. 8.
- Shambaugh, David, 1999/2000, “China’s Military Views the World,” *International Security*, Vol. 24, No. 3.
- Tow, T, William, 2007, “America’s Asia-Pacific Strategy Is Out of Kilter,” *Current History* (September).
- Wendt, Alexander, 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A Study on the Changes in Sino-Japanese Relations after the 1990s

Shin, Hyeon-suk

(Yonsei University)

Koh, Hee-tak

(Yonsei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how the Japanese government's diplomatic policies on China changed by government after the 1990s. We also attempt to demonstrate the links between theoretical knowledge and the reality of the situation in East Asia. The independent variables in this paper are China's rapid economic growth and Japan conservatism (especially the Koizumi-Fukuda cabinet in Japan).

The significant features of the political order are that the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Japan have deepened and diplomatic affiliations among Japan, China and the US have been conducted against the Soviet Union. Sino-Japanese relations are entering a transition stage, shifting from the older special political order that started during the Cold War. Japan is strengthening the US-Japan alliance and is trying to normaliz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Japan. Japan's policy towards China has shifted from an oriented strategy like the ODA program and the Japanese government seeks to prevent China from territorial ambitions. Also, China raises pressure on Japan in sea disputes like the East China Sea.

Through this paper, we emphasize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needs to maintain reciprocal relations with China to improve its international standing and is seeking to better ties with China in Northeast Asia.

Keywords : Diplomatic affiliations, China's rapid economic growth, Japan's conservatism, 1972-era political order, Japanese government's diplomatic policies.